

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 110-743 서울시 중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355
친박한 하빌: PSPD, 나우라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m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귀하
발 신 참여연대(담당: 조현희 723-5303)
제 목 정권말기, 무더기 사형집행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7. 12. 31. (총 2쪽)

보 도 자 료

정권말기, 무더기 사형집행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법무부는 12월 30일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의 죄로 사형이 확정된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전격적인 사형을 집행했다.
2. 전국 교도소에서 전격적으로 감행된 사형집행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로 95년 11월 흉악범 19명을 집행한 후 최대의 규모였으며, 54년 68명, 76년 27명, 82년 23명을 집행한 후 15년 만에 최대규모였다.
3.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기대속에 출범한 김영삼정권이 결국은 현재의 경제파탄을 국민의 과소비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정권말기의 어떠한 혼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국민의 얼어붙은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으니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깊은 우려가 된다.
4.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국민화합 차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관용과 평화의 통치이지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사형집행일 수 없다. 더욱이 무더기 사형을 정권 말기에 집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사형제도는 세계 98개국에서 반인도적인 형벌로 금지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너무 많아 교도소의 수용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집행한 것은 궁색한 이유로밖에 볼 수 없다.

5. 나아가 우리는 IMF한파가 몰아치고 대규모 실업과 사회불안이 예상되는 현 시기에 내려진 이번 사형집행이 사회동요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로 결정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대해서 크게 우려한다. 사형제도는 그 실제 효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사형집행을 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6. 아무리 세상을 불안케 하고 해를 끼친다고 낙인찍힌 죄인일지라도 인간이 심판할 수는 없다. 위정자들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틀을 잠시나마 이탈했다고 해서 그들에게만 모든 죄를 안고 떠나라 하기엔 너무나 가혹하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랑과 용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우리의 형벌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